

농협개혁의 이상과 현실



농업정책연구소장
이 언 목

최근 농협개혁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파주 교하농협에서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조합을 해산하려고 하고, 구미 장천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하기도 하고, 달성 유기조합에서는 조합임직원들의 연봉을 대폭 내리도록 했다. 농민단체들의 농협중앙회개혁 요구에 이어 농촌현장에 있는 농민단체회원과 농민들의 일선조합개혁 요구가 끊어오르고 있다. 공영방송과 유력 일간지에서도 ‘농협 이대로는 안된다’며 농협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마침 정부에서도 1300개에 달하는 면단위 조합을 500개 수준으로 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정부의 조합통합계획 속에도 농협개혁이 왜 필요하며,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조합을 통합하고 임직원들의 ‘과도한’ 월급을 깎는 일도 중요한 개혁과제이지만 농협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농협을 개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농민과 농산물의 시장대응력을 높여서 우리 농업을 살리는 데 있다. 농민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생산을 해도 제대로 팔지 못하면 소득을 올릴 수 없고,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농업은 계속될 수 없다. WTO출범이후 국내 농산물시장은 우리끼리 경쟁했던 ‘폐쇄’ 경제, 구멍가게 유통에서 세계의 농민이 경쟁하는 글로벌경제, 대형할인마트 유통으로 천지개벽을 했다. 다국적기업과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막강한 구매력과 정보 앞에 경제사업계나 한다는 시골 면단위 조합직원과 조합장도 그야말로 왜소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면단위 “잡화점” 조합에서 전국적인 대형유통업체가 필요로 하는 품질규격과 물량의 상품을 대줄 수 없다. 간간한 품질조건과 “턱없이 낮은 가격”에도 울망졸망한 조합과 중간상인들이 서로 납품을 하겠다고 덤비고 있다. 남는 게 있을 턱이 없고, 그 여파는 결국 농민의 손해로 귀결된다.

농협을 개혁해야 할 더욱 심각한하고 절박한 이유는 대형유통업체들의 구매교섭에 국내농산물을 제치고 외국 농산물이 더 많이 덤비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눈물에도 한·칠레FTA는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WTO에 제출되어 있는 쌀 재협상안이 어떻게 타결되느냐, WTO/DDA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느냐에 따라 우리 국내 농산물시장에 덮쳐올 외국농산물의 파고와 농민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개방이 유보되어 있는 쌀이나, 관세가 높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은 그만큼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은 전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농민의 빈곤문제를 농산물수출을 통해 탈출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관민이 합심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한편으로 상대국의 시장을 개방시키려는 집념을 가

지고 있다. 쌀 개방이 다시 한번 유보되고, 관세상한제는 없던 걸로 되고,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우리 농민들의 열망이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 농민이 아무리 열망을 하고, 우리 정부가 아무리 협상을 잘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시장은 자꾸만 개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 농업은 살아남아야 하고, 열심히 일하는 농민은 잘살아야 한다. 생산여건이 불리한 우리는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장 좋은 값에 팔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뽕뽕 뭉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품질이 뛰어나면서도 고른 농산물을 생산해야 소비자가 믿고 찾는 '브랜드' 농산물이 될 수 있다. 농민들이 이렇게 뭉치면 생산 면에서의 협동뿐만 아니라,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가 가능하고, 생산과잉일 때는 수급조절이 가능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도 용이하다. 품목 관련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고, 집행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생산은 지역별, 품목별로 하더라도 판매는 가급적이면 대단위 지역으로 통합해야 대량수요자의 요구에 맞추면서도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다. 충분한 물량과 거래교섭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광역지역을 포괄하거나, 더 많은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판매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면단위 지역조합은 말할 것도 없고, 시군단위 지역조합도 단독으로는 글로벌경쟁시장에 대응하기가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을 위한 협동은 비교적 좁은 주산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판매를 위한 협동은 훨씬 광역단위로 통합해야 한다. 아마도 품목별 판매조합이라면 전국에 수 개 정도, 지역별 판매조합이라면 도 단위 정도, 부류별 판매조합이라면 도 내지 수 개 도를 포괄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유럽은 대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품목별 생산조합과 광역에 걸치는 판매조합, 그리고 조합원 농민 모두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긴밀하게 협동해야 한다. '진정한' 협동과 '진정한' 농민들의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은 전량 자기가

속한 판매조합을 통해서만 판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조합의 성과가 나의 손익으로 직결되므로 지금까지 조합직원과 조합장에게 조합을 맡겨 놓을 수 없다. 조합원과 대표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스카우트하고, 감독도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 조합장은 그야말로 명예직인 농민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고, 조합은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고, 투명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면단위 지역에 기반을 둔 '잡화점' 농협의 기능은 품목별로 전문화되어야 할 생산협동 기능에도 부적합하고, 넓은 지역에 걸쳐야 할 판매협동 기능에도 맞지 않다. 조합구역을 없애버리고, 모든 정책적인 지원을 전문화된 품목조합 중심으로 해나간다면, 많은 조합들이 하나 내지 수 개 품목으로 전문화된 생산협동조합으로 진화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조합 수도 인원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광역에 걸치는 판매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가지고 제 기능을 다 한다면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지도기능이 거의 필요 없는 게 아닌가?(세계 어디에도 우리처럼 '막강한' 중앙회는 없다) 다만, 몇몇 경제사업장이 남게 되겠지만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중앙회에 끝까지 남게 되는 업무는 신용사업관련 업무와 농민 전체를 위한 정치·경제·문화적인 업무 정도가 아닐까?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농협의 형태와 기능에 비해 현재의 그것들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좁은 지역과 기득권에 얽매인 현재의 1300개 지역조합과 군소 품목조합, 그리고 '막강한' 중앙회가 품목과 기능 중심으로 변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 많은 사람과 조직과 재산을 새로운 농협의 형태와 기능에 맞춰 변화시키고, 정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또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전량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실력 있고 투명한 조합도 많지 않고, 맡기겠다고 선뜻 나서는 농민도 많지 않다. 많은 양보와 타협, 위기의식의 공유, 그리고, 창의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인동민**